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¹⁾와 한국의 역할

이 성 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목차

- I. 서론
- II.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격과 의제
- III.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국제적 맥락과 배경
- IV.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국내적 맥락과 배경
- V.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 대한 인권적 비판
- VI. 개최국 한국의 역할과 기여
- VII. 결론

I. 서론

한국에서 연이어 국제회의가 개최되면서 한국의 역할과 높아진 위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5차 G20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이하 부산 회의)를 개최한다. 그리고 내년 4월에는 서울에서 제2차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회의를 주최할 경우 주최국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국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주최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회의의 의제 내용과 결과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변방이 아니라 주요 국가의 하나로 그 영향력과 위상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만큼 국제문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외부의 기대와 압력

1)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와 국민의 책임 의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금융경제, 개발 그리고 핵 안보 등 21세기 글로벌 가버넌스의 핵심 의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를 연속해서 주최함으로써 한국은 남이 만든 국제기준을 따라가는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부산회의를 맞이하여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국익 추구가 아니라 평화, 인간개발, 민주주의, 인권, 성평등, 반부패, 생태적 지속가능성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부합하는 모범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작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특히 많은 개도국이 ‘한국형 경제개발’에 관심을 가졌다면, 부산 회의를 계기로 ‘한국형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 및 발전되어온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제기준과 정책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엔과 OECD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 원칙이자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은 인권을 숙지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성숙한 세계국가 Global Korea’¹⁾와 선진외교를 구현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먼저 부산회의의 성격과 의제, 국제적 및 국내적 배경과 의의를 다루고 부산회의의 주된 의제 내용을 구성하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부산회의를 개최하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격과 의제

부산회의는 2005년 채택된 원조효과성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PD)과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Accra Agenda for Action AAA)의 후속회의로 OECD의 원조효과 실무작업반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 WP-EFF) 주관하는 4번째 고위급회의(High-level Forum, HLF4)이다. 부산회의는 원조에 관한 최고 수준의 정부 간 고위급 회의로 원조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대표²⁾ 이외에도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³⁾ 포함 약 2000명 정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조효과성에 관한 OECD의 고위급회의는 그 첫 회의가 2003년 로마에서 원조의 조화를 주제로 열렸고 이어 2005년 2차 고위급회의에서는 원조효과에 대한 파리선언, 2008년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고위급회의에서는 아크라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

1) ‘성숙한 세계국가 Global Korea’는 2008년 국가비전인 ‘선진인류국가’의 5대 국정지표 중의 하나이며 외교통상부는 ‘세계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외교’를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외교목표의 하나로 설정하였다.

2) 보통 장관이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일부 국가는 대통령 또는 수상/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하기도 한다.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는 약 300-500명 참가 (국내 참가자 포함) 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회의 열리기 전 3일간 부산에서 사전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입장을 모으고 본회의에서 발언 및 로비 전략을 준비한다.

〈표 1〉 OECD 고위급회의의 역사

	년도 / 장소	주제 및 결과문서
제1차 고위급회의	2003년 / 로마	원조 조화에 대한 로마 선언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제2차 고위급회의	2005년 / 파리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제3차 고위급회의	2008년 / 아크라	아크라행동강령 (Accra Agenda for Action)
제4차 고위급회의	2011년 / 부산	부산 결과문서 (Busan Outcome Document)

파리선언은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원칙 - 주인의식 (Ownership), 원조 조화(Harmonization), 원조일치 (Alignment), 성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및 상호책임 (Mutual Accountability)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개발된 12개의 지표(indicators)에 따라 2010까지 선언의 이행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⁴⁾

부산회의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서 채택한 공약의 달성여부를 평가 및 분석하고 최근의 개발환경을 반영한 원조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따라서 3일간의 회의 기간 중 참가자는 전체회의, 정치적 토론, 주제별 심층토론 및 부대행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 과정에서 수립된 견해는 최종 결과문서에 반영되어 향후 2015년과 그 이후의 원조효과성의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OECD에서의 논의를 보면 부산회의의 논의 틀은 ‘개발효과성의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원조 효과성 (Aid effectiveness in the broader context of 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원조 효과성과 개발효과성 두 개념을 기본 축으로 삼고 있다. OECD는 현재 개발효과성의 개념과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OECD 안팎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⁵⁾ 개발효과성의 관점과 맥락에서 원조 정책의 틀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회의 의제 개발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보조기구(subsidiary bodies)⁶⁾와 산하의 공식 비공식 실무분과(working group)와 주제별 분과(thematic groupings)는 물론 원조효과성 실무작업반은 산하

4) 현재 평가는 파리선언의 5대 원칙과 12개 지표를 중심으로 현재 약 70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7월에 모니터링 결과가 취할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7월과 10월 열리는 OECD 원조효과성 작업반(WP-EFF)과 집행위원회 (ExCom)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의 결과는 증거로 활용되어 부산회의의 논의와 결과문서 협상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5) Workshop on Development Effectiveness (Draft Report, 26 October 2010, OECD, Paris)

6) DAC 산하의 보조기구로는 통계에 관한 실무작업반과 평가, 젠더, 환경, 가난, 거버넌스(GOVNET)에 대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다. GOVNET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개의 태스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권관련해서는 인권태스크 팀 (Task Team on Human Rights)과 인권과 분쟁에 관한 공동작업반(Joint GOVNET/INCAF (International Network for Children and Families) 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and Conflict) 두 개가 있다. 인권태스크 팀은 양자 및 다자 원조 기관 사이의 국제인권 네트워크로서, 인권과 개발을 통합하여야 하는 당위성 제공 및 공여국의 이해와 합의를 증진시키고 일관성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 다섯 개 클러스터⁷⁾가 참여하고 있다. 이 모든 단위가 자체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이행과 개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2008년 아크라 제3차 고위급회의 이후 원조효과성에 관련하여 2010년 3월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SSC)⁸⁾과 2010년 4월 동티모르 수도 딜리에서 취약국가(Fragile States)⁹⁾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이스탄불 원칙(Istanbul Principles on CSOs Development Principles)을 마련하였다.¹⁰⁾ 한국정부는 부산회의 준비 차원에서 작년 12월 서울에서 원조체제(Aid Architecture)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파리선언의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함께 취약국가, 남남협력, 원조체제 및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III.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국제적 맥락과 배경

위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부산회의가 열릴 2011년의 개발을 둘러싼 국제환경은 2005년 파리회의와 2008년 아크라 회의 때와 비교하여 크게 변하였다. 부산회의를 앞두고 전개되는 국제적 환경변화는 개발 특히 국제개발협력을 금융의 세계화, 기후변화, 민주주의와 인권, 안보와 군축 등과의 연관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2008년 본격화된 식량위기와 에너지 위기, 그리고 미국 발 금융위기는 대다수 개도국이 최근까지 성취한 개발의 성과를 무산시켰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각종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으로 개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공여국이 잇달아 원조금액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이번 부산회의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의 세계화 - 특히 투기성 금융자본, 식량에 대한 투기, 개도국 천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약탈하는 투자/투기 - 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7) 다섯 개의 클러스터는 주인의식과 책무성 (클러스터 A), 수원국의 시스템 (클러스터 B), 투명성과 책임성있는 원조 (클러스터 C), 파리선언 이행 진전에 대한 평가(클러스터 D), 개발의 성과 관리 (클러스터 E)이며 클러스터 A에는 다시 건강, 남남협력 그리고 역량개발과 민간부분 지원에 대한 작업단위(Work Stream)가 있다.

8) Bogota Statement: Toward Effective and Inclusive Development Partnerships (March 2010)

9) Dilli Declaration: A new vision for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nternational Dialogue on Peacebuilding and Statebuilding in Dili, 9-10 April 2010)

10) 시민사회단체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오픈 포럼(Open Forum)은 2008년 아크라행동강령 Paragraph No 20 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60여개 국가와 지역별 협의를 거쳐 2010년 9월 28-30 터키 이스탄불에서 세계회의를 열어 8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스탄불 원칙을 채택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www.cso-effectiveness.org 참조

그리고 작년 말 튀니지에서 촉발된 북아프리카의 민주화 열풍은 이집트에서 무바라크 독재정권의 몰락과 리비아에서의 유혈 민주화투쟁을 촉발시켰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다른 권위주의 국가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민주화 바람의 영향으로 이번 부산회의의 준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발과 민주주의 및 인권 즉 민주적 가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는 미국의 9.11 사태 10주년으로 테러리즘과 개발 문제 또한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¹¹⁾ 게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으로 대변되는 악화된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군축과 개발의 문제 또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산회의가 열리는 2011년은 최빈국의 관점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와 발전권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발전권은 올해가 1986년 채택된 유엔 발전권 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25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¹²⁾ 한편 올해는 1981년 처음 열린 이래 10년마다 열리는 최빈국 제4차 회의(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Assembly-IV)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¹³⁾ 따라서 원조의 주 대상국인 최빈국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빈국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전권에 기초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주창하고 주류화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¹⁴⁾

한편 부산회의의 주제인 원조 즉 국제개발협력은 유엔의 밀레니엄개발목표(MDGs)의 8번째 목표인 개발을 위한 지구적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에 해당된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간 진행되는 MDGs 캠페인은 이미 반환점을 돌아 최근 MDGs 이행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만들어진 개발협력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이 2008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MDGs 이행에 대한 평가를 했고 작년 9월 유엔 총회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MDGs 이행 10년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유엔 총회 특별 회의에서 종합 평가와 함께 2015년 이후의 MDGs에 대한 정치적 논의가 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 9.11 이후 가난으로 인해 소외감과 좌절감을 겪은 청년층이 탈리반에 합류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테러리즘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가난 극복 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12) The Right to Development를 한국어로 개발권 또는 발전권 두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학자와 관점에 따라 development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번역어가 달라진다. 개발은 경제개발을 주로 의미하는데 반해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과정을 포함하는 종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글에서는 발전권으로 표기하였다.

13) UN은 1971년 최빈국 24개국을 LDC로 지정하였고 1981년부터 10년마다 LDC 국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 5월 이스탄불에 열리는 제4차 회의는 2001년 3차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행동계획(Brussels Programme of Action, BPoA)의 이행을 평가하고 향후 10년의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LDC Assembly-IV에 관해서는 <http://www.un-ngls.org/ldc4/registration/conference/> LDC 관련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LDC Watch의 활동에 대해서는 www.ldcwatch.org 참조.

14) 나비 필레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아직 정치적 선언에 머물고 있는 발전권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자료를 발간하였고 지난 3월 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16차 인권이사회에서 한 연설에서 발전권 25주년을 맞이하여 발전권의 적극적으로 증진 및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http://www.ohchr.org/Documents/Issues/Development/Infonote_RtD-25Feb_212011.pdf 참조.

그리고 원조문제는 MDGs 이행을 위한 개발재원의 관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다. 유엔은 지난 2000년 개최한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밀레니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¹⁵⁾ MDGs는 이 선언의 개발의제와 목표를 정식화한 것이었는데 유엔은 MDGs의 자원마련을 위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발재원(Financing for Development)을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결과로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ey Consensus)가 채택되었고 6년 후인 2008년 도하에서 몬테레이 컨센서스 이행을 평가한 도하 선언 (Doh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몬테레이 컨센서스에 따르면 개발재원은 크게 세금 등 국내재원, 해외직접투자(FDI) 등의 민간자본, 무역, 왜채 탕감, 원조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재원 등으로 구성된다. 원조 특히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도국 개발재원에서 비중이 매우 작고 일부 규모가 작고 취약한 국가를 제외하고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가 않다. 그렇지만 원조가 가진 공적 성격으로 인해 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발효과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 유엔의 개발과 개발재원 관련 회의 역사

년도	장소	회의	결과 문서
1995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코펜하겐 선언과 행동계획Copenhagen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2000	뉴욕	밀레니엄 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밀레니엄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밀레니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002	몬테레이	유엔개발재원회의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몬테레이 컨센서스 Monterey Consensus
2002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lan of Implementation of WSSD
2005	뉴욕	유엔 정상회의의 고위급 회의 UN Summit High-level Plenary Meeting	““In Larger Freedom””
2008	제네바	제1차 경제사회이사회 개발협력포럼 ECOSOC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의장 요약문 Chair's Summary

15) 밀레니엄 선언은 90년대 유엔이 개최한 환경, 인권, 사회개발, 여성, 인구, 주거권, 식량 등에 관한 국제회의의 결과를 총괄한 문서로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과 민주주의, 환경, 유엔 강화 등에 대한 진단과 결의를 담고 있다.

년도	장소	회의	결과 문서
2008	도하	유엔개발자원 후속회의 Follow-up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도하 선언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2010	제네바	제1차 경제사회이사회 개발협력포럼 ECOSOC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의장 요약문 Chair's Summary
2010	뉴욕	유엔 MDGs 정상회의 UN Summit on MDGs	““Keeping the Promise””
2011	서울	G20 서울 정상회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 Seoul Development Consensus
2011		유엔 발전권 선언 25주년	
2013	뉴욕	유엔 MDGs 특별행사 UN Special Events on MDGs	

IV. 부산 제4차 OECD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국내적 맥락과 배경

부산회의는 2년 전 OECD DAC에 가입하고 1년 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먼저 부산회의는 한국정부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고위급회의이다. 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하였고 13년 후인 2009년 11월 OECD의 DAC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OECD 역사에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첫 국가가 되었다. DAC 가입을 전후하여 한국정부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대외원조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에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작년 10월에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GNI대비 0.1%에 도달하였고 2015년에는 0.25%까지 증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원조의 증액은 총액은 여전히 OECD 평균 0.31에 훨씬 못 미치지만 경제위기로 대다수 국가가 원조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원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가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부산회의를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국제기준에 비추어 미래지향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산회의는 한국이 주도한 G20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채택 이후 한국 정부가 개최하는 첫 개발 관련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G20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의 후속 회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로 11월 11-12일 개최된 G20 서울 정상회의는 정상 선언문과 서울 행동 계획이 포함된 합의문과 세 개의 부속서(Annex)를 채택하였다. 부속서의 제목은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Development Consensus for Shared Growth),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On Development), 반부패 행동계획(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이었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왜 다함께 성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배경 설명과 경제성장 집중,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세계적 지역적 제도 문제, 민간부문의 참여, 보완성, 성과지향의 6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년간 개발 행동 계획은 인프라,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식량안보, 복원력 있는 경제성장, 금융소외계층 포용, 국내 자원 동원, 개발 경험 공유 등 9가지 핵심 분야에서 16개의 사업을 담고 있다.

한국정부는 자신이 주도한 G20 개발 의제를 ‘제3의 길’로 표현했었는데 G20정상회의는 이를 반영하여 “서울 개발 컨센서스”라는 정치적 합의가 담긴 제목을 채택하였다. 서울 컨센서스는 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탈규제화를 비롯해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워싱턴 컨센서스, 사회복지와 기초적인 인간욕구(basic human needs)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그리고 재정원조에 대한 의존성을 G7/8의 접근이 가진 한계들을 극복하고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을 강조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발에는 서구식 모델만이 아닌 다양한 경로와 모델이 존재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¹⁶⁾

그러나 개발 관련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 평가는 다소 비판적이거나 유보적이었다. 그리고 유엔과 OECD 일부에서도 G20의 경제성장 중심 개발 패러다임이 워싱턴 컨센서스와 큰 차이가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표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이한 평가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개발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었다. 즉, G20은 ‘경제성장 없이 개발 없다’는 말처럼 경제위기 시기에는 복원력 있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적인 가치와 우선순위로 하여 모든 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는 인권, 성 평등, 환경보존, 반부패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치와 기준을 중시하지 않는 경제성장은 인권침해와 노동권 탄압,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경제성장이 자동적으로 인간개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시민사회와 민주적인 가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른바 사회개발 또는 인간개발 측면의 강조이다.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책임 프레임워크(accountability framework)의 실

16) G20 위원회, Development Issue Paper (June 2010)

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시민사회의 역할 및 참여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업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구축에 환영의 뜻을 표하나 기업과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는 반면 시민회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결국 한국정부가 주도한 G20의 개발의제는 일부 개도국의 환영은 받았지만 한국 포함 대다수 공여국과 개도국 개발 NGO의 공감과 지지를 얻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서울개발 컨센서스를 올해 개발 관련 하여 열리는 이스탄불 최빈국 회의와 부산회의에서 어떻게 평가할지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V.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 대한 인권적 비판

이 글의 주된 목적인 부산회의를 준비하는 한국 - 정부와 시민사회 - 이 인권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과 기여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산회의의 핵심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을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졌듯이 파리선언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도국의 의견과 국제시민사회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공여국 중심의 논의 구조 속에서 제정되었다. 따라서 출발부터 개도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여국 중심의 기준이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2008년 아크라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원조에 대한 가장 큰 국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인 Better Aid는 부산회의를 앞두고 2010년 10월 “개발협력에서의 개발효과성-인권적 관점”, 이어 12월 “개발협력을 정의롭게 만들기-가버넌스 원칙과 중점 분야” 그리고 “부산 회의에 대한 메시지와 제안” 세 개의 정책문서를 연이어 발간하였다.¹⁷⁾

특히 “개발협력에서의 개발효과성-인권적 관점” 문서는 인권 관점에서 기존의 원조효과성 논의가 문제가 있음을 10가지로 비판하면서 새로운 개발협력 틀을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10가지 비판을 다섯 개로 묶어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에서 다루고 있는 원조효과성 의제가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공여국 중심이어서 가버넌스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원조 관리와 제공이 지나치게 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가난퇴치와 사회적 차별과 성별 및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 등 개발효과성 성취를 이행했는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적 재정관리와 가난퇴치전략문서(PRSP)는 주로 IMF와 세계은행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둘째, 원조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부적절한 지표 설정에서 기인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17) Better Aid의 활동과 문서에 대해서는 www.betteraid.org 참조.

다. 국가 내 및 국가 간 원조의 흐름과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주적 주인의식과 책무성을 실현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적 주인의식, 성 평등 지표가 모니터 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국가가 비준하고 동의한 각종 국제인권규범과 개발목표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셋째, 지나친 일반화와 민주적 거버넌스 문제의 간과이다. 파리선언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과 환경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정책적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상황과 필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아크라행동강령은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 사이의 지나치게 불평등한 권력 관계의 시정과 관련하여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IFIs)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체제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넷째, 젠더와 노동 관점의 부재이다. 파리 선언은 젠더 관점을 결여하고 있으며 성 평등에 대해 형식적으로 언급하는데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아크라행동강령은 ILO의 품위 있는 일자리(decent work) 의제와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 모두 공적개발원조(ODA)와 몬테레이 컨센서스에서 다른 다른 개발재원과의 연계를 충분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비체계적 접근으로 인해 국제적 기준에 대한 합의와 제도 및 정책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앞에서 열거한 비판을 근거로 Better Aid는 인권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이다. 원조와 개발은 국내적 및 국제적 인권기준과 규범과 일치해야 한다. 특히 1986년 유엔 발전권 선언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비롯한 주요 9개 인권조약은 물론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Cord Labour Standards)이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의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은 성별,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등 가난과 구조적 불평등의 근원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IADGs)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경제사회적 권력관계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방향으로 변혁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은 외부의 원조에 의존하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는데 기여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체제 (development architecture)”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총체적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강조하는 참여, 책무성, 비차별, 자력화 등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국회, 시민단체와 주민을 포함하는 민주적 주인의식이 강조되어야 하며 시민사회의 개발효과성에 관한 이스탄불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정부의 개발 정책을 감시하는 독립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효과적 수단으로 유엔의 반부패협약(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을 비준하고 준수해야 한다.

넷째, 개도국의 개발정책과 우선순위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민주적 주인의식과 자결권과 발전권 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조건부 또는 구속성 원조는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엔이 개최한 각종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조와 개발협력에 관한 기준설정과정에서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가버넌스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특히 다자간 또는 양자간 무역정책이 개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개발원조와 무역의 관계 특히 해외직접투자(FDI), 외채 등의 문제를 보다 명시적으로 일관성있게 다루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Better Aid는 공여국 중심으로 구성된 OECD DAC이 새로운 개발체제의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OECD DAC은 원래의 설립 목적대로 정보를 수집 체계화하고 원조흐름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하여 원조의 모범적 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에 국한해야 하고, 그 대신 유엔 특히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의 개발협력 포럼(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이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효과성과 새로운 개발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위의 다섯 가지의 가이드라인은 2005년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의제를 대체하는 국제시민사회의 전략으로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는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수용하고 있다.

VI. 개최국 한국의 역할과 기여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제사회는 부산회의의 주최국인 한국의 최근 OECD DAC 가입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ODA 증액 그리고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 주도 등으로 인하여 개발과 원조 관련 한국의 역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 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개발의제를 도입하면서 천명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유엔 회원국가로서 현재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동시에 2008년 출범한 G20과 2009년부터는 OECD DAC 회원국가 이기도 하다. G20과 OECD이 부자나라 끼리의 폐쇄적인 모임이라면 유엔은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개방된 회원 구조를 가지고 있다. G20과 OECD의 모든 회원 국가는 유엔의 회원국이기도 한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가는 평화와 안보, 경제사회 개발 그리고 인권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한 1945년

의 유엔 헌장과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너무나 상식적인 말이지만 모든 G20과 OECD 회원국은 UN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법과 규범에 따른 법적,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그러한 의무는 정부가 비준한 구체적인 국제인권조약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과 발전권 선언 등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유엔 총회가 채택한 각종 선언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유엔의 인권 규범은 G20과 OECD가 설정한 국제규범에 대해 우선성을 지니며 후자는 전자의 틀 안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부최고대표를 배출한 국가로서 한국은 국제인권에 관해 다른 나라에 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각별한 정치적 도덕적 책무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¹⁸⁾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¹⁹⁾ 한국은 최근까지 경제성장(개발)과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이룬 ‘모범 국가’로 평가 받아왔다. 출발은 군부정권에 의한 개발독재 (Development Dictatorship), 즉 인권을 무시한 개발정책이었지만 절대가난을 극복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민주정부를 수립한 민주적 개발 (Democratic development) 모델로의 전환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이른바 ‘한국형 발전 모델’은 천연자원도 없고 전쟁 이후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이룩한 성과이었기에 아직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대다수 개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이러한 모델의 지속가능성과 보편성 즉 다른 개도국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 십 년 동안 서방 선진국의 다양한 조언과 지원을 받고도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개도국에게 한국의 모델은 여전히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의 경험을 한국적 특수성 보다는 개발, 인권, 민주주의, 평화 등 보편적인 개념과 프레임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하여 성공과 실패,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정리하여 개도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즉 원조는 일방적인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과 경험 공유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개발경험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보다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모델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쌍방향의 과정으로 발전의 양상과 단계는 달라도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부산회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기여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먼저 국내에서 전개되는 각종 개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전권과 인권에 기반한 개발에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RBAD)²⁰⁾ 원칙에 따라 점검할 필요가 있다.²¹⁾ 발전권이 발전과 인권을 권리의 언어로 내용적 통합을 이루었다면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발전

18)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강경화 유엔 부최고대표(Deputy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19) 손준현, “유엔 보고서 “한국, 표현의 자유 후퇴” 한겨레 신문 2011년 2월 16일, 검색일 3월 9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63726.html>

20) 보통은 HRBAD를 줄여서 RBA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로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권을 구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²²⁾ 이러한 접근은 개도국 뿐 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가난의 문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을 평가하는데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과거 절대가난에서 벗어나는 시기 뿐 아니라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원칙이기도 하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재정비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발은 무역, 투자, 금융,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고 각 분야마다 국제적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법적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 분야마다 국내법적 의무와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간의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국제개발협력 관련하여 유상원조와 G20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OECD 국제개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부처 간의 견해와 접근방법의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인권을 우선적인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국정부가 비준한 7대 국제인권조약 위원회의 인권 개선 권고안 및 한국 관련 주제별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와²³⁾ 국가별인권상황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의 권고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²⁴⁾ 국제인권조약 가운데 개발과 관련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이 규약 침해 시 개인적 진정을 가능케 하는 선택 의정서 비준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⁵⁾ 그리고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 및 도입하여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의 개발경험을 민주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해석 및 분석하여 모듈화하고 이를 개도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SP)은 현재 경제적 측면에만 치우쳐 한국의 개발경험을 반쪽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발전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발전권의 정신에 따라 지식공유사업의 내용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의 시민사회에 대한 원조사업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현지의 인권 및 시민단체의 권력감시 기능이 강화되면 수원국에서

21) 김신, 양영미 역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Development As a Human Rights)」 (서울:휴머니티스, 2010). 15명의 저자가 2003년 노벨재단이 주최한 개발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들을 추후 발전시켜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초판을 출판하고 2010년 벨기에 Intersentia N.V.에서 재판을 출판.

22) UN과 Oxfam은 HRBAD의 핵심요소로 PANEL을 제시한다. P (Participation 참여), A (Accountability 책무성), N (Non-Discrimination 비차별), E (Empowerment 자력화), L (Linkage to Human Rights Standards, 인권기준과의 연계).

23) 현재 유엔에는 40여개의 특별절차가 있으며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한 주제별 특별보고관으로는 1995년과 2010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2006년 이주노동자 인권 특별보고관이 있으며 조사 방문 후 인권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24) 유엔 인권기구의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홈페이지 <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참조

25)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200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11년 3월 약 30개국이 서명했고 현재 몽고, 에콰도르, 스페인 3개국이 비준을 하였다.

시행되는 한국의 원조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자연히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원조의 책무성과 효과성이 높아지게 된다.

넷째, 한국정부는 OECD의 GOVNET에 가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부산회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기구는 OECD 내에서 원조효과성에 대한 실무작업반이지만 OECD내에서 인권을 실질적으로 다루는 곳은 가버넌스 네트워크(Network on Governance, GOVNET)이다.²⁶⁾

GOVNET은 과거 경제 가버넌스 중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버넌스로 그 개념과 업무의 범위를 확장 및 심화시켜왔다. 즉 GOVNET은 90년대 민주주의, 개발과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유엔과 UNDP가 개발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을 가버넌스의 관점에서 수용한 것으로 OECD의 국제개발협력 비전과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GOVNET을 통해 선진 공여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을 배우고 이에 비추어 한국적 원조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²⁷⁾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공정선거감시운동과 정보공개청구운동과 의회감시 등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캠페인 경험은 모듈로 개발하여 공유할 가치가 있는 유용한 경험들이다.

다섯째, 부산회의를 계기로 활용하여 OECD내에서 발전권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적 가치이자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발전권을 냉전시기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냉전시대 이념적 갈등의 산물로 이해하는 편향된 관점을 지양하고 식량, 에너지, 금융의 복합적 위기에서 드러나는 오늘날 개발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인권적 지침으로 재인식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발전권에서 강조하는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와 북반구의 부자 나라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적 환경 특히 무역규정, 부채탕감 및 투기자본 통제 그리고 군축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주최국인 한국 뿐 만 아니라 부산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포함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중요한 원칙과 방법론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6) GOVNET은 2010년 현재 OECD DAC가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실무작업반과 6개의 네트워크의 하나이다. 가버넌스 네트워크(Network on Governance, GOVNET)는 인권, 부패방지, 거버넌스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모범적 거버넌스(Good Governance)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01년 4월 설립되었다. 회원국은 한국을 제외한 기존의 23개 OECD/DAC 회원국과 영구 옵저버인 IMF, World Bank, UNDP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OVNET은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여국 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인권, 투명성, 책무성, 참여와 평등, 반부패 및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역량강화와 함께 개발도상국이 국가형성시 겪은 어려움 또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권고사항을 OECD/DAC 회원국과 산하기구에 제공한다. 또한 회원국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정책 및 분석 도구개발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를 통해서 원조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 최근 독립성 상실과 ‘반인권적’ 조직 운영 논란으로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이전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권한과 역할, 특히 국가인권행동계획(NAP) 수립,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그리고 인권교육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모범으로 간주되어왔다.

Ⅶ. 결 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산회의는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과 기준 그리고 원조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이다. 특히 작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경험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비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인권을 지나치게 이념적, 당파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국내적 맥락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규범으로 인정하고 실천하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시급하게 요청된다. 그래야 부산회의 개최국으로서 한국의 개발경험을 인권의 보편적 언어로 해석하고 이를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원조의 효과성을 높여 개도국의 가난퇴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는 선순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산회의는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모두에게 인권에 기반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한국형 국제개발협력 모델’을 만들고 인권선진화의 국가적 과제를 성취할 수 있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ODA Watch,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인가, 한국화 방안인가?” ODA Watch 뉴스레터 제 47호, 2010년 11월 16일
- ODA워치 DAC 팀, “연재1호: 제4차 부산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와 시민사회의 역할” ODA Watch 뉴스레터 제48호, 2010년 12월 31
- 이성훈, “G20 정상회의와 개발 - 절반의 성공이자 실패” ODA Watch 뉴스레터 제47호, 2010년 11월 16일
- 홍지영, “올바른 개발효과성 논의와 HLF4 부산회의 준비를 위해-16차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효과성 작업반” ODA Watch 뉴스레터 제47호, 2010년 11월 16일
- 권해룡 “G20 개발의제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4)
- 권혁주 “취약국가의 이해: INCAF와 국제협력 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3)
- 김은미, 김진경 “OECD/DAC 거버넌스 네트워크(GOVNET) 논의동향과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3)
- 김인, “HLF4 준비 공동연구 진행상황 보고-Catalyzing Development: A New Vision for Aid”,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3)
- 이련주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4)
- 이태주, “G20 개발의제와 한국 ODA의 진로”,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3)
- 이현주 “남남협력의 효과성과 과제: HLF4 및 글로벌 차원의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3)
- 정우진 “한국형 개발협력모델”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1)
- 한재광 “지구촌 빈곤감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국제개발협력 (서울, KOICA, 2010. No. 4)
- 김신, 양영미 역 「인권을 생각하는 개발 지침서(Development As a Human Rights)」 (서울;후마니타스, 2010)

2. 국외문헌

- BASPIA,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에 대해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Cooperation,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N OHCHR, 2006)
- Better Aid, Development effectivenes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 rights-based perspective BetterAid (Oct 2010)
- Better Aid, Making development cooperation just: Governance principles and pillars (Dec. 2010)
- G20 준비위원회, “Development Issue Paper” (June 2010)
- Chair Summary, “The Evolving Global Aid Architecture” (Dec. 2010)